

강원 산불 피해복구 '시동'

조달청, '긴급입찰·수의계약' 적극 활용

주요 시설자재 최우선 처리
피해기업 유동성 등 지원 확대
국별 전담반 구성해 대책 추진

조달청이 강원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공사에 긴급입찰과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에 나선다. 또한 레미콘·아스콘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주요 시설자재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조달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원 산불 피해복구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조달청은 피해복구를 위한 공사와 물자 등에 대해 긴급입찰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긴급입찰·수의계약을 통해 계약 체결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산불 피해복구에 투입되는 레미콘·아스콘 등 주요 시설자재의 경우 특별재난 지역의 조달요청 건을 최우선 처리하고, 계약·납품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산불 피해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유동성 지원 확대, 계약기간 연장·불이익 면제, 피해기업 재기 지원 등이 핵심이다.

조달청은 피해지역에 소재한 조달기업에 원·하도급, 노무비, 자재·장비비 등 자금 지원을 위해 수요기관 등에 협조를 요

청하기로 했다.

또한 보증사·은행과 협의를 거쳐 피해기업에 대한 원활한 선금보증, 네트워크론 우대금리 적용, 심사기간 단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생산시설 피해 등으로 약정기간 내 계약·납품이 어려운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상적인 물품 생산이 어려운 경우 피해 조달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정상화 기간까지 납품을 유예해준다.

피해기업의 재기를 위해서는 입찰참가 및 단가계약 추진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산불 피해복구 전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본청 각각의 국별로 전담 지원반을 구성해 지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강원지방조달청에는 '조달기업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원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지원대책은 유례없는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마련됐다"면서 "행정안전부, 재난지역 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조달기업의 삶의 터전이 하루라도 빨리 예전의 모습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